

유일호 부총리 노동4법 등 국회처리 요청

두 야당 입장 엇갈려

더민주 이종걸 '회의적' · 국민의당 박지원 '돌팔매 맞더라도 협조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여기서 이 원내대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솔직하게 말하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4법, 관세법, 자본시장법 등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서비스업) 의료공공성 전혀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향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와 논의해 협력할 것은 빨리 협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당시에 당에서 다 반대를 했지만 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래서 정부가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조조정에 대해 "부총리가 이라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조성 해운만 구조조정하면 끝

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솔직히 말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협조를 구할 때 우리도 돌팔매를 맞기로 하고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 하고, 변명만 하면 되느냐. 솔직히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경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주 기자

원유철 원내대표 합의 추대 시동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합의추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의원과 정진석 의원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으며 유기준 의원과도 접촉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바람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화합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경선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김재경 의원이 말한 것처럼 출마 희망자들이 (합의추대) 마음을 모아서 결집해주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는 무죄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 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웅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중진 '전대 시기' 결론 도출 실패

'당헌대로' · '연기하자' 의견 팽팽... '8~9월 개최' 중재안도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더민주 소속 중진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기전대론'과 '전대연기론'을 놓고 1시간 30분동안 토론을 벌였으나 두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회동은 당 지도부가 요청하고 5선고지에 오른 원혜영 의원이 20대 총선 기준 4선 이상 중진들에게 연락을 돌려 마련됐다. 당초 참석대상은 20여명이었지만, 14명 안팎이 참석했다. 중진모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회

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대로 하자는 주장과 연기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며 "중재안으로 8월말~9월초에 전대를 하자는 의견도 두 사람 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어 "중진들이 사이에서도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비대위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중진회동에서는 당의 의견 수렴 그리고 필요할 때 중지를 모아서 당의 운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회동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

출 문제와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자고 제안했으나, 전대 시기를 논의하느라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더민주 4선 이상 의원 21명 가운데 정세균·문희상·원혜영·이상민·변재일·박병석·실훈·안민석·강창일·오세재·양승조·추미애 의원과 김진표·송영길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중진 의원 중에서는 문희상·이종걸·김진표·노웅래 의원 등 6~7명 가량이 전대 연기 찬성 입장, 이석현·송영길·이상민·김영춘 의원 등 9~10명 정도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주 기자

이상호 민병두 '출사표' 우원식 노웅래 의원 등도

더민주 원내대표 경쟁 뜨겁게 달아올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이상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출마회견을 가졌다. 우 의원은 오후 2시, 민 의원은 오후 2시40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당초 이날 오후 1시 30분 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4선 이상민·강창일·실훈·안민석 의원, 3선인 이상호·민병두·노웅래·우원식·홍용표 의원 등으로 압축된다. 그간 이상호 우원식 민병두 의원의 3파전을 점치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국민의당이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다. 박 원내대표의 맞선대로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4선 후보군들은 "4선인 박지원 의원에 맞서기 위해서는 4선을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3선 후보군들은 "아예 젊은 세대가 나서 독식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번 경선의 항배에는 20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표심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용주 기자

어버이연합에 칼 겨누기

더민주-국민의당, 불법자금 지원

의혹 규명 태스크포스팀 가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에 칼을 겨눴다. 두 당 모두 의혹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더민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기로 했다. 더민주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 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첫 회의를 갖고 "환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겠다"고 단언했다. 더민주에서는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TF위원장을, 진선미·박병계 의원, 이철희·백혜련·김병기·이재정 당선인이 위원을 맡는다. 이춘석 위원장은 "법조, 국정원, 전략기획에서 정쟁한 실력을 갖춘 위원들을 선임했고, 실체와 배후까지 규명할 생각"이라며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환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은 청와대의 권력, 전 국정원인연합회의 재력, 국가정보원의 공작능력이 삼위일체가 돼 보수단체를 동원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급이나 국정원의 일개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있고, 우리의 목적은 그 검은 손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며 "전경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월3일 오전9시에 2차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권한을 활용,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여러 조사도 개별적 또는 단체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당 논쟁 등을 보면 저희와 다른 입장이 보이진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다룰 단위를 소통하겠다"고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TF 가동을 선언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 삼남행정관의 집회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 뒷선의 지시나 개인 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개인의 행위로 치부하는 청와대의 언급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검찰은 전경련의 자금 지원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외의 보수단체를 지원해 현안 개인 광고나 기사를 게재할 것을 지시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 인정하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지난달 29일 "경제정책 실패 인정이 먼저"라며 사죄를 요구하는 등 성토에 나섰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위 회의에서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양적완화 정책에 앞선 정부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하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양적완화 정책을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도(正道)가 아니다.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의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이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라며 "이래서 대화가 되겠다.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지금은 기업의 부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해 나가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할 때"라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가 남은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박 대통령식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천 대표는 "정부는 당장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양적완화) 처방을 남발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며 "또 부실 대기업 입장에서 정부 관료들만 잘 관리하면 기업에 위기가 오더라도 선택적 양적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일"이라며 "구조조정 자금도 결국 대기업이나 채권단,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수 기득권자에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반면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로 인해 급여소득자의 수익이 감소해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게 된다"며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의 실패로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은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8년 간 해야 될 구조조정을 '경제가 잘된다'고 국민을 속이며 미뤘었다가 이제 (경제문제가) 터진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변해야 협력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막상만 내리치고 국회에 책임을 넘기면 절대 (협력)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놔다. /박용주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6-669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국민 불린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후 2007년 ~ 2008년 보완·정비를 거쳐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보완·정비 필요성 대두
□ 2014년도 법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불린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보완·정비 조기 추진 결정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 대상지 : 완주군 관내 전농지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

- 변경 기준
① 도로, 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 발생된 지역
② 경지정리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결하여 집단화되어 있는 미경지정리 지역 중 규모가 5ha이하인 농업진흥구역 등
□ 해제 기준
○ 해제 유형 ① : 2007~2008년 해제기준 준용

[농업진흥구역]

- ① 도로, 하천 등으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② 집단화규모(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 미달 미경지정리 지역 등

[농업보호구역]

- ①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농업진흥구역 해제 기준과 동일)
② 수원지가 대체 및 수해지 개발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 해제유형 ② : 주변 개발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 해제유형 ③ :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제외)
○ 해제유형 ④ :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등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05.02. ~ 05.16(15일간)

5. 열람장소 : 완주군청 농업농촌정책과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필지조서 및 해제·계획안 정비 도면은 열람 장소와 완주군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의견서 제출 안내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내에 완주군청 농업농촌정책과 농지담당자에게 서면(우편 가능)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경·해제 대상 범위가 방대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우므로 이 공고로 같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농업농촌정책과 농지담당자(☎ 063-290-3214, 32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2. 완주군 수